

2024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2025. 11.



국 회 운 영 위 원 회

목 차

I. 감사의 목적	1
II. 감사기간	1
III. 감사 대상기관	1
IV. 감사 실시경과	2
1. 감사반 편성	2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3
V. 증인 및 참고인 명단	4

VI. 주요 감사실시 내용 12

1. 국회사무처	12
2. 국회도서관	17
3. 국회예산정책처	18
4. 국회입법조사처	18
5. 대통령비서실	18
6. 국가안보실	24
7. 대통령경호처	26
8. 국가인권위원회	26

VII. 시정.처리 요구사항 34

1. 국회사무처	34
2. 국회도서관	35
3. 국회예산정책처	36
4. 국회입법조사처	36
5. 대통령비서실	36
6. 국가안보실	37
7. 대통령경호처	37
8. 국가인권위원회	37

I 감사의 목적

-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국정현안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사 및 입법활동 등에 반영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감사기간

- 2024. 10. 31.(목) / 11. 1.(금) [2일간]

III 감사 대상기관 (총 9개 기관)

위원회선정 대상기관		본회의승인 대상기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호 해당 국가기관	1. 국회사무처 2. 국회도서관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5. 대통령비서실 6. 국가안보실 7. 대통령경호처 8.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제4호 해당 감사원의 감사대상기관	국회미래연구원
계	8개	계	1개

IV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국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28인)으로 단일 감사반 편성

■ 감사반

구 분	교섭단체 또는 정당	위 원 명	비 고
감사반장	더불어민주당	박 찬 대	위원장
감사위원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강유정 고민정 김민석 김성희 노종면 모경종 서미화 양문석 윤건영 윤종균 이소영 전용기 정진욱 추미애	간 사
		추경호 배준영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권영진 김정재 임이자 정성국 주진우	간 사
	조국혁신당	신장식	
	개혁신당	천하람	

구 분	직 위	성 명	비 고
감사보조자	수 석 전 문 위 원	김 상 수	
	국 회 운 영 심 의 관	주 성 훈	
	행 정 실 장	서 재 만	
	국 회 운 영 조 사 관	김 양 혜	
	국 회 운 영 조 사 관	조 진 속	
	국 회 운 영 조 사 관	김 선 홍	
	국 회 운 영 조 사 관	설 그 린	
	행 정 관	최 혜 진	
	주 무 관	최 선 아	
	주 무 관	우 지 현	
	주 무 관	장 윤 명	
	주 무 관	문 오 속	
	속 기 사	손 선 락 외	
	정책연구위원	김 소 연	더불어민주당
		이 건 용	국민의힘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감 사 장 소
2024. 10. 31.(목)	10:00	1. 국가인권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본관 319호실)
	14:00	1. 국회사무처 2. 국회도서관 3. 국회예산정책처 4. 국회입법조사처 5. 국회미래연구원	
2024. 11. 1.(금)	10:00	1. 대통령비서실 2. 국가안보실 3. 대통령경호처	국회운영위원회 회 의 실 (본관 319호실)

V

증인 및 참고인 명단(총 112인: 증인 109인, 참고인 3인)

1. 기관증인(총 79인)

■ 국회사무처 증인 (18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국 회 사 무 총 장	장 관 급	김 민 기	
입 법 차 장	차 관 급	진 선 희	
사 무 차 장	차 관 급	박 태 형	
기 획 조 정 실 장	이 사 관	이 양 성	
법 제 실 장	관 리 관	박 철 호	
국회세종의사당추진단장	관 리 관	송 수 환	
의 사 국 장	이 사 관	정 명 호	
국 제 국 장	이 사 관	구 현 우	
관 리 국 장	이 사 관	임 종 수	
방 송 국 장	이 사 관	김 명 진	
의 정 연 수 원 장	이 사 관	서 덕 교	
문 화 소 통 기 획 관	이 사 관	정 지 은	
공 보 기 획 관	이 사 관	성 소 미	
감 사 관	이 사 관	김 복 현	
경 호 기 획 관	이 사 관	황 충 연	
국회민원지원센터장	부 이 사 관	김 광 선	
인 사 과 장	부 이 사 관	남 궁 인 철	
운 영 지 원 과 장	서 기 관	김 대 회	

■ 국회도서관 증인 (8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국 회 도 서 관 장	차 관 급	이 명 우	
의 회 정 보 실 장	관 리 관	현 은 희	
법 률 정 보 실 장	관 리 관	장 지 원	
기 획 관 리 관	이 사 관	이 진 경	
정 보 관 리 국 장	이 사 관	유 미 숙	
정 보 봉 사 국 장	이 사 관	김 준 임	
국회기록보존소장	부 이 사 관	송 미 경	
국회부산도서관장	이 사 관	조 정 권	

■ 국회예산정책처 증인 (5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예 산 정 책 처 장	차 관 급	지 동 하	
예 산 분 석 실 장	관 리 관	김 경 호	불 출 석
추계세제분석실장	이 사 관	상 지 원	
경 제 분 석 국 장	일반임기제 2급	진 익	
기 획 관 리 관	이 사 관	정 승 환	

■ 국회입법조사처 증인 (5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국회입법조사처장	차 관 급	박 상 철	
정치행정조사실장	관 리 관	정 순 임	
경제산업조사실장	관 리 관	강 종 석	
사회문화조사실장	이 사 관	홍 일 표	
기 획 관 리 관	이 사 관	심 정 희	

■ 국회미래연구원 증인 (1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국회미래연구원장	(공 석)	(공 석)	
연구지원실장	연구위원	유 희 수	직무대리

■ 대통령비서실 증인 (11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대통령비서실장	장 관 급	정 진 석	
정책실장	장 관 급	성 태 윤	
정무수석비서관	차 관 급	홍 철 호	
홍보수석비서관	차 관 급	이 도 운	
민정수석비서관	차 관 급	김 주 현	불출석
시민사회수석비서관	차 관 급	전 광 삼	
경제수석비서관	차 관 급	박 춘 섭	
사회수석비서관	차 관 급	장 상 윤	
과학기술수석비서관	차 관 급	박 상 욱	
저출생대응수석비서관	차 관 급	유 혜 미	
총무비서관	별정직 고위공무원	윤 재 순	

■ 국가안보실 증인 (11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국 가 안 보 실 장	장 관 급	신 원 식	
제 1 차 장	차 관 급	김 태 효	
제 2 차 장	차 관 급	인 성 환	불 출 석
제 3 차 장	차 관 급	왕 윤 중	
안 보 전 략 비 서 관	비 서 관	강 재 권	
외 교 비 서 관	비 서 관	이 총 면	
통 일 비 서 관	비 서 관	이 인 배	
국 방 비 서 관	비 서 관	최 병 옥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비 서 관	김 상 호	불 출 석
경 제 안 보 비 서 관	비 서 관	김 현 옥	
사 이 버 안 보 비 서 관	비 서 관	신 용 석	

■ 대통령경호처 증인 (8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대 통 령 경 호 처 장	차 관 급	박 종 준	불 출 석
차 장	관 리 관	김 성 훈	
기 획 관 리 실 장	이 사 관	안 경 호	
경 호 본 부 장	이 사 관	이 광 우	불 출 석
경 비 안 전 본 부 장	이 사 관	이 진 하	
지 원 본 부 장	이 사 관	김 대 경	
경 호 안 전 교 육 원 장	이 사 관	노 승 룡	
감 사 관	부 이 사 관	강 병 인	

■ 국가인권위원회 증인 (12인)

직 위	직 급	성 명	비 고
위 원 장	장 관 급	안 창 호	
상 임 위 원	차 관 급	남 규 선	
상 임 위 원	차 관 급	이 총 상	
상 임 위 원	차 관 급	김 용 원	
사 무 총 장	(공 석)	(공 석)	
기 획 조 정 관	고 위 공 무 원	조 영 호	
정 책 교 육 국 장	고 위 공 무 원	이 석 준	
침 해 조 사 국 장	고 위 공 무 원	서 수 정	
차 별 시 정 국 장	고 위 공 무 원	염 형 국	
군 인 권 보 호 국 장	부 이 사 관	박 흥 근	
교 육 협 력 심 의 관	고 위 공 무 원	안 성 율	
운 영 지 원 과 장	서 기 관	송 호 섭	

2. 일반증인 및 참고인(총 33명: 증인 30명, 참고인 3명)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1	증인	고상만	전 군사망사고진상 규명위원회 사무국장	10.31.	국가인권위원회	- 군 사망사고 원인 진상 규명 관련	출석
2	참고인	송해진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	10.31.	국가인권위원회	- 이태원참사 2주기 관련	출석
3	증인	김건희	영부인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관련 - 명품가방 수수사건 관련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 대통령 관저 공사 수수 의혹 등 관련	불출석
4	증인	명태균	-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관련	불출석
5	증인	김대남	전 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불출석
6	증인	이원모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선거 개입 의혹 관련	불출석
7	증인	김영선	전 국회의원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선거 개입 등 의혹 관련	불출석
8	증인	강혜경	전 김영선 의원실 회계담당 비서관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선거 개입 등 의혹 관련	출석
9	증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대표	11.1.	대통령비서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불출석
10	증인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	11.1.	대통령비서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 관련	불출석
11	증인	이정필	김건희 도이치 주식 거래계좌 관리인	11.1.	대통령비서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불출석
12	증인	김기현	전 토러스투자증권 (현 DS투자증권) 강남센터장	11.1.	대통령비서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불출석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13	증인	김태영	21Gram 대표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불출석
14	증인	정영균	희림 대표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출석
15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11.1.	대통령비서실	-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출석
16	증인	송호중	전 대통령경호처 과장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불출석
17	증인	정상석	대통령경호처 전 총무부장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불출석
18	증인	김신	대통령경호처 가족부장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불출석
19	증인	김태훈	대통령경호처 수행부장	11.1.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 입틀막 경호 사건 관련	불출석
20	증인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제1차관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	출석
21	증인	이윤세	해병대 공보정훈실장	11.1.	대통령비서실	- 채해병 순직 수사 외압 사건 관련	불출석
22	증인	김진우	(주)이에스아이엔디 대표이사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출입 및 회의 참석 의혹 - 친인척 국정개입 의혹	불출석
23	증인	권준영	행안부 노사후생과 과장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출석
24	증인	이영인	행안부 청사관리본부 과장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 불법 의혹 관련	출석
25	증인	강기훈	대통령실 국정기획 비서관실 행정관	11.1.	대통령비서실	- 음주운전 봐주기 징계처분 의혹	불출석
26	증인	황종호	현 대통령실행정관 (국정기획비서관실)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선거개입 관련	불출석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출석 여부
27	증인	김용현	국방부장관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이전 관련 -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불출석
28	증인	여인형	방첩사령관	11.1.	대통령비서실	- 북한 오물풍선 투하 관련	출석
29	증인	박희영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관저 불법 이전 관련	불출석
30	증인	정덕채	검사	11.1.	대통령비서실	-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관련	불출석
31	증인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	11.1.	대통령비서실	- 제20대 대통령선거 불법 여론조사 의혹 관련 - 대통령실 공천 개입 관련 등	출석
32	참고인	장인수	전 MBC 기자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선거 개입 등 의혹 관련	출석
33	참고인	봉지욱	기자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실 공천 개입 관련	출석

■ 일반증인 및 참고인 철회 현황

연번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출석일	대상기관	신문요지
1	증인	이용균	알스케어 대표	11.1.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비서실 공관 증축 관련
2	참고인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	11.1.	대통령비서실	-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

1. 국회사무처

- 국회 안전·보안 관련
 - 국회 청사의 안전·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및 장비·시스템 등 보강 필요
 - 국회 청사 전기차 화재 대응력 제고를 위한 관련 설비 성능개선 및 직원 대상 화재진압·대피 등 매뉴얼 교육 검토 필요
 - 의원회관 지하 주차장 공간의 폐기물 적재 금지 및 관리 필요
- 국회 시설·설비 관련
 - 국회 경내 주차공간 부족에 대한 개선 대책 마련 필요
 - 화재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관리 강화 필요
 - 전기차 충전소 고장 시 수리 기간 장기화 개선 필요
 - 의원회관 주차장의 노후화된 노면 재도색 등 보수 필요
 - 직원 체력단련실 공간·시설 부족 문제 개선 검토 필요
 - 의원회관 개별 냉방 도입 검토 필요
 -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근·셔틀버스 노선 확대 예산 반영 필요
 - 국회 디지털 정보안내게시판 이용규정 준수 필요
 - 모바일 출입증의 이용 효율성 제고 필요
 - 국회 상시출입증 발급 시 국회 재직기간 요건 완화 필요
 -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 등에 대한 국회 전자출입 사전등록 수요 파악 및 홍보 등 조치 필요
 - 국회 주요건물 창문에 새 충돌 저감을 위한 스티커 부착 등 검토 필요
 - 국회 예식장 예약 개시일 상·하반기 분리 및 취소수수료 도입 필요

○ 인사·보수 관련

- 국회사무처 직원의 비위사건에 대한 엄정한 조사·징계 필요
- 육아시간과 시간외수당 중복사용 규제 개선 검토 필요
- 보좌직원 초과근무수당 현실화를 위한 정액지급분 또는 초과근무 인정시간 확대 검토 필요
- 보좌직원 실제 근속연수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방안 마련 필요
- 보좌직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하여 연가보상일수 확대 및 회의수당 등 특별수당 지급 방안 마련 필요
- 보좌직원에 대한 복지제도 확충 검토 필요
- 3급 보좌직원 신설 검토 필요
- 위원회 행정보조요원에 9급 비서관 수준의 기준호봉 인정 및 인턴비서관 시급 인상 등 처우개선 필요
- 행정보좌직원 서무수당 신설 및 수행보좌직원 운전점임수당 상향 필요
- 2025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6급이하 비서관 호봉 인상 예산 반영 필요
- 국회사무처 공무원 시간 외 근무에 대하여 정당한 보수가 지급될 수 있도록 개선책 마련 필요
- 공무원 복지 포인트 인상 필요
- 국회공무원 포상 확대 및 소수직렬 저연차 직원에 대한 포상 형평성 제고 필요
- 방호직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인력충원 등 검토 필요

○ 국회세종의사당 이전 관련

- 국회세종의사당의 조속한 건립 추진 필요
- 국회 운영 이원화에 따른 국회의원 및 직원들의 교통·주거 불편 등 비효율 해소방안 마련 필요
- 국회 운영 일원화를 위한 국회세종의사당의 완전 이전 검토 필요
- 여의도 국회의사당 부지의 향후 국가적 활용계획 수립 필요

○ 장애인 지원 관련

- 중증장애인 국회의원 활동지원인력을 고려한 의원실 운영비 증액 지원 필요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회의실·간담회실·기자회견장 등 출입·이용 불편 개선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조치 필요
- 국회 후생시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를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과기부 검증기준에 충족하도록 교체·보완 필요
-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서비스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노력 필요

○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 에너지 절약, 재생에너지 사용 등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로드맵 마련 필요
- 국회 관용차량의 친환경 차량 비율 제고 필요

○ 여야 협치 촉진을 위한 제도 관련

-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여야 협치 부문 시상 시 여야 공동토론회 개최 실적 등을 계량화하여 반영할 필요

- 여야 공동토론회 개최 시 국회의원 의정활동 지원경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의 제도 도입 검토 필요
- 국회 관계법률 등 제도 정비 관련
 -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한 국회 자료제출 요구권 강화 필요
 - 동행명령 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 필요
 - 국회의 예산심의권 실질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회도서관 중립성·전문성 제고를 위한 도서관장추천위원회 구성 검토
- 대전 국회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관련 지역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갈등 관리 필요
- 의원회관 회의실 사용허가 관련
 - 대통령 탄핵 관련 행사에 대한 회의실 사용허가가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국회사무처는 질서·안전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사용허가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
- 의정기록과 시간 외 근무수당 부정수급 의혹 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필요
- AI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를 고려하여 의정기록과 직무분석 실시 및 조직 진단·개편 필요
- 국회 AI 음성인식시스템의 지속적인 고도화 노력 필요
- 국회 내 인터넷망 증속 조치 필요
- 의정지원DB구축 용역업체의 복수사업 수주 문제 지적 및 용역 기간 중 인력·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방안 검토 필요

- 의원실 지원경비의 유형별 수요 파악 및 집행률 제고 방안 모색 필요
- 계약업체의 근로기준법 준수 유도를 위한 국회사무처의 적극행정 필요
- 2025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영상편집용 PC의 추가 도입 및 사양 업그레이드를 위한 예산 확보 필요
- 국회고성연수원 관련
 - 국회고성연수원 예약 편의 제고를 위한 예약시스템 개선 필요
 - 국회고성연수원 객실 증축 등 시설 확충을 위한 노력 필요
 - 국회고성연수원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등 검토 필요
- 지속가능발전 인력양성 교육 및 보좌직원 연구·교육 강화 등 의정연수원의 교육과정 내실화 필요
- 국회사무처의 대언론 소통강화를 통한 대국민 신뢰도 제고 필요
- 종이없는 국회 실현을 위하여 종이서류의 전자화 방안 검토 필요
- 국회 방문객 휴게실 설치, 키오스크 방식의 방문신청 및 출입관리 등 국회 방문객 편의 제고를 위한 방안 도입 검토 필요
- 감사관실 소속 국회인권센터의 공정성·독립성 강화방안 검토 필요
- 국회사무처 내 공익신고 담당 기구의 설치·운영 검토 필요
- 국회 공식 유튜브 채널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 필요
- 미래연구원 미래칼럼 국회의원 기고문을 언론사가 부적절하게 수정하여 기고한 것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 필요
- 국회어린이집 0세반 입학 자격요건에서 전년도 9월~12월 중 태어난

영아가 제외되는 문제점 지적 및 개선 필요

-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 관련, 국회 주관 추모 행사 개최 기준 마련 필요
- 검찰 압수수색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및 조력 지원 등 검토 필요
- 국회방송의 국정감사 중계 확대 필요

2. 국회도서관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영남권인 부산, 충청권인 세종에 이어 호남권인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 설치 방안 검토 필요
- 국회도서관 데이터베이스 관련 용역 2건을 수행 중인 용역업체(무X유) 프로젝트 매니저(PM)가 국회사무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제처 등 다른 기관과의 용역 계약조건에 풀타임 근무로 되어 있고, 국회도서관과의 용역 1건의 계약조건에도 풀타임 근무로 되어 있는 등 용역사업 간 인력 중복 문제 지적
- 점자·음성자료 등 장애인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료 구입 및 제작 노력 필요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장애인 정보접근성을 고려한 키오스크 교체·보완 필요
-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한 국회도서관장 임명방안 검토 필요
- 아르고스 시스템의 기능 보완을 통한 서비스의 질 제고와 차별성 강화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한 노력 필요
- 부울경 지역 지식문화와 국회 차원의 대국민 정보서비스 제고를 위하여

2025년도 예산안에서 삭감된 도서구입비 확보 필요

- 세계 헌법 연구 및 학계 연구 지원과 대국민 서비스를 위하여 「세계의 헌법」 개정판(제4판) 발간 필요

3. 국회예산정책처

- 부처별 예산요구서 및 지출한도 국회 제출, 하향식 예산안 심사방식 도입 등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 개정 방안 마련 필요
- 국회예산정책처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결 노력 필요

4. 국회입법조사처

-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수행한 장애인 탈시설 의제에 관한 연구보고서와 간담회에서 시설거주 및 탈시설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는데, 당사자가 현실에서 경험하는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고 이를 입법과 연계한 분석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의 만성적인 인력 부족 문제 해소 노력 필요

5.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 관저 공사 관련
 - 2022년 6월 현대건설이 스크린 골프연습장 시공사 대표에게 보낸 메일에 따르면, 관저 내 스크린골프 시설을 포함한 휴게공간이 조성된 것으로 보이며, 만약 사실이 아닐 경우 현대건설에 대한 법적 조치 필요

- 정권에 관계 없이 대한민국의 경제 수준과 대통령의 격에 맞는 관저 시설 설치 필요
-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관저 공사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점검 필요
- 대통령 관저에 대한 무분별한 가짜뉴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야간 관저를 가지고 공격하는 것은 품격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 및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강력대응 필요
- 대통령집무실 약 70평을 증축하면서, 용산구에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은 「건축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
- 대통령 육성 녹음파일 관련
 - 대통령이 명태균과 경선 이후에 문자를 주고받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은 거짓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사과와 납득할 수 있는 해명 필요
 -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은 선거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대화 수준에 해당하고, 이를 공천·선거 개입으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지적
 - 대통령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의무 위반, 국민의힘 선거업무를 방해함으로써 「형법」상 업무방해죄, 여론조사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법률을 위반하여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의견
 - 지난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 ‘바이든-날리먼’이 조작되었음을 증명한 소리규명연구소가 이번 녹음파일 성문분석을 통해 임의로 편집·조작된 흔적을 발견하였다는 내용의 언론보도가 있다는 의견
 - 소리규명연구소의 실력 등에 대한 의심과 검토가 필요하므로, 그 발표결과를 너무 신뢰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
 - 대통령실의 해명에 따르면, 2022년 5월 9일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는

약 6개월만에 이루어진 것인데, 대통령이 먼저 ‘김영선 前 의원’의 얘기를 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의 해명이 석연치 않은 측면이 있다는 지적

- 대통령실은 현기환 前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판례를 예로 들고 있으나, 이는 특정 인물들에 대한 리스트를 전달한 것에 그친다는 점에서 전략 단수공천이 된 이번 사안과는 다르다는 의견
-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보수언론에서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개진하고 있음에도 별것 아니라는 대통령 및 대통령실의 태도는 국민에게 오만과 독선으로 비칠 뿐이라는 지적

○ 그 밖의 명태균 관련

- 김영선 前 의원과의 녹음파일을 보면, 명태균이 대통령실 관련 여론조사 사업 수주 가능성을 자신있게 언급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명태균이 새 정부와 연계된 사업 논의를 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는 의견
- 대통령실은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답하였으나, 2024년도 대통령비서실 소관 예산 각목명세서를 보면 정기 지표 조사 명목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므로, 명태균이 언급한 대통령실 관련 여론조사 사업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
- 명태균의 대통령 및 김건희 여사를 통한 창원시 국가산단 선정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명태균이 기획·실무·선정·홍보 등에 전부 개입한 것으로 생각되는데, 창원시가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인만 하고 있는 것은 창원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2022년 11월 창원 제2국가산단 현장 실사에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평가요원이 명태균과 만났거나 소통했는지 여부, 명태균이 토지 매수를 중용한 대산면 일대 등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매수·매도 현황 및 조명래 부시장을 비롯한 창원시 공무원과 관계가 있는지 등에 대한 전수조사 필요
- 2022년 6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들의 파업과 관련하여, 초기에는 소극적으로 대응하던 정부가 명태균이 대우조선을 방문하여 대통령실에 보고 후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압박하여 파업이 타결되었고, 이후 2023년 대우

조선이 한화오션에 특혜성 인수가 이루어졌는데, 정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명태균의 역할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다는 지적

- 명태균과 강혜경의 녹음파일에 따르면, 명태균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 후보지 선정 현수막과 보도자료를 미리 준비하였고, 다음날 있을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발표될 것이라는 점까지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명태균이 국가산단 선정에 개입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의견
- 국가산단 선정은 발표 전날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고 지자체에 통보가 되기 때문에 명태균이 발표 하루 전날 알게된 것은 특이한 일이 아니고, 입지는 계속 변경되는 것으로 명태균이 이를 주도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의견
- 강혜경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명태균은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을 한두달 전부터 확신을 갖고 주변에 얘기를 했다는 의견
- 명태균이 김건희 여사를 통해 지방선거 공천에 개입했다는 내용에 등장하는 박완수 도지사, 김진태 도지사, 조은희 의원 등은 각 당내 경선을 통해 공천을 받은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명태균의 발언은 신뢰할 수 없다는 지적
- 명태균이 강혜경 증인에게 대통령실이 발주하는 여론조사 용역을 수주하겠다고 여러차례 얘기했으나, 실제 수주한 건이 없다는 점이 명태균 발언의 신뢰도를 판단할 수 있는 가늠자라는 의견
- 명태균은 김영선 前 의원의 공천과 관련하여 평소 주변에 대통령과 직접 통화한 내용을 자주 들려주었고, 실제 공천으로 이어졌으며, 대통령을 당선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미래한국연구소는 대선기간 총 58회의 공표용 여론조사를 의뢰했는데, 모든 비용을 대통령에게 받지 않았다는 점, 모든 여론조사 질문지를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성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여론 조작 또는 왜곡에 해당한다는 지적
- 명태균은 대선 공표조사, 자체조사, 면밀조사 등 총 81회, 3억 7,520만원

에 해당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나 대통령으로부터 비용 대신 김영선 前 의원의 공천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

- 지방선거 당시 강원도의 경우 당초 단수공천이 결정되었다가 김진태 당시 후보를 추가하여 경선을 하는 것으로 공관위 번복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 명태균이 개입한 정황이 있어 보인다는 지적
- 2022년 7월 명태균이 투기과열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에 영향을 행사하여 세종 대신 경남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는 의혹이 있다는 의견
- 대통령실 또는 당시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대통령비서실장이 명태균 관련 사항을 부정하면서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하지 않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

○ 대통령 국정지지도 관련

-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항에 대해 정치적·도의적 책임 없이 법적 문제가 없음만을 강조함에 기인한 것이라는 지적
-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권위와 신뢰가 상실됨에 기인한 것이므로, 위기감을 가지고 해결방안 모색 필요

○ 언론보도와 신용한 증인의 증언에 따르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강남 신사동 가로수길에 소재한 화랑을 임차하여 선관위에 신고되지 않은 별도의 선거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는 중대한 선거범죄에 해당한다는 지적

○ 김건희 여사 관련 여러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희림종합건축사무소의 경우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던 공동대표가 지난 2018년 사망한 이후에는 친분 있는 임직원이 없고, 글로벌 6위 설계 업체로서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을 수주한 것이라는 의견

○ 김대남 前 선임행정관이 이명수 기자한테 한 발언에 따르면, ‘칠상시’로 꼽히는 황중호 행정관이 대통령실 내 확실한 세력으로서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고 있다는 지적

- 현재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를 보좌하는 제2부속실이 없으므로, 부속실 발 지시의 주체가 대통령인지 김건희 여사인지 명확하지 않아 김건희 여사의 국정 및 인사 개입에 대한 여러 의혹 존재
- 김정숙 여사의 경우 화성소방서 소방공무원 격려 방문, 인도 타지마할 방문 등 다양한 행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의 마포대교 방문을 통치행위라고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
- 320여개 공공기관 전수조사 결과 대선후보 캠프, 용산 대통령실 및 검사 등 총 458명의 낙하산 인사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되고, 특히 임기가 남아 있는 공기업 사장들도 교체되었다는 점에서 이른바 윤정부 블랙리스트에 해당한다는 지적
- 음주운전으로 벌금 800만원의 형사처벌과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은 강기훈 선임행정관이 징계가 끝난 후 대통령실로 복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김대남 前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중에 새민연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한 언론사 고발 사주, 극우 유튜버 시위 사주 등을 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 내부감사나 법적 조치 및 새민연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확인 필요
- 정무수석비서관이 야당과의 소통을 보다 활성화 할 필요
-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금융투자소득세를 조속히 폐지하고 증시 부양책을 확실히 세울 필요
- 202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폐지된다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확신을 줄수 있도록 적극 홍보 실시 필요
- 윤석열 정부는 2023년 최초로 1인당 GNI가 일본을 추월하고, 역대 최고 고용률과 최저 실업률을 달성했으며, 24조원 규모의 체크 원전을 수주하는 등 여러 성과가 있었다는 의견

- 연금개혁 특위를 조속히 발족하여 모수개혁 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논의할 필요 및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전략기획부 신설 필요
- 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소개하고 촛불승리전환행동이 주최하여 국회에서 열린 ‘탄핵의 밤’은 계엄령 준비설을 토대로 한 괴담정치로 생각된다는 의견
- 문재인 前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딸 문다혜씨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문제 등을 반면교사 삼아 대통령을 보다 철저히 보좌함으로써 국정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
-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대통령실의 책임감 있는 대통령 보좌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6. 국가안보실

- 임종석 前 대통령비서실장의 ‘2개국가 수용’ 또는 ‘영토조항 폐지’ 등의 발언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러한 사상과 생각에 대해 윤석열 정부에서 바로잡을 필요
- 방첩사령부에 전두환 사진은 걸려 있고, 김재규 사진은 걸려 있지 않은 것은 일종의 정치적 판단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는 지적
- SAR 탑재 위성 등 우리나라 대북 감시자산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안보를 잘 지킬 필요가 있다는 의견
- 문재인 前 대통령과 김정은 회담 시 USB 관련
 - 2018년 4월 문재인 前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하면서 전달한 USB에 대한 진상 파악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사항 해소 필요

- 해당 USB는 통일부가 제작한 것으로, 원전과 관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바로 공개 필요
- 북한이 발사한 ICBM은 미국의 주요 도시까지 타격이 가능한 무기인데,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대처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을 통해 위관급 장교와 부사관의 봉급 및 단기복무 간부들의 장려금 등을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나, 2025년도 예산안이 전년과 동일한 규모로 편성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또한 군대를 파병함으로써 스스로 어려움에 처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는게 국민의 여론이라는 의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와 협조하여 타격을 가한다는 등의 한기호 의원의 문자에 대해 국가안보실장이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은 최소한 「형법」상 외환유치 예비·음모죄에 해당하며, 대통령이 이를 인지했다면 내란 또는 외환으로 소추될 수 있다는 지적
- 북한군 파병 이후 대통령이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전쟁의 위기상황에서 성급한 발언에 해당한다는 의견
- 미국 트럼프 후보가 본인이 당선될 경우 러-우 전쟁을 24시간 안에 끝내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가 한·미·일 동맹을 강조하면서 러시아와 대척 국면을 만드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
- 국민들이 지금 국가안보실이 전시상태를 만들어서 계엄령을 선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많다는 지적
-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발견된 후 합동참모본부가 질병청에 생물테러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탐지키트를 요청하였는데, 에볼라와 같은 생물테러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 필요
- 북한 오물풍선 수거작전을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에게 두창 백신을 접종

할 필요가 있는데, 정부가 관련 예산을 계속 삭감하고 비축분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

-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필요
- 지난 CIA의 대통령실 도청의혹 관련하여 정부는 도청이 없다거나 유출된 내용의 상당수가 위조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었는데, 미국에서 검거된 기밀유출범의 공소장과 이에 대한 미국 법원의 판단을 보면 실제 미국의 도청이 있었고, 유출된 내용에 조작이 없었다는 지적

7.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함으로써 잘 대처할 필요
- 2024년 1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 및 2월 의료개혁 민생토론회 및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대통령의 생명과 신체에 위해가 없었음에도 과잉 경호를 한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 집행은 법률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대통령경호처가 저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

8. 국가인권위원회

- 국가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정책 일반
 - 3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5명으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에서 부결될 경우 전원위원회에서 다루도록 운영규칙 개정 필요
 - 소위원회 의결정족수에 관한 전원위원회 결정사항의 부적절성 지적
 - 소위원회 위원을 4명으로 증가시킨 제도 개선안이 법률에 어긋남이 없

다는 의견

- 진정 기각의 경우에도 위원 3명 이상의 출석과 3명 이상이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행정법원의 판결내용 존중 필요
- 소위원회 위원 중 1명만 반대해도 진정을 기각할 수 있도록 운영규칙을 개정하려는 시도의 문제점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합의제 정신은 단순한 관례가 아닌 입법자의 의도라는 의견
- 소위원회에서 2대 2인 경우 결론이 나지 않으므로 기각이 아니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라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는 의견
- 소위원회에서 다수결로 진정을 각하 또는 기각해버리는 것은 인권 최후의 보루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부합하지 않는 기능주의적 운영이라는 지적
- 소위원회에서 한명이라도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면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 공정거래위원회와 국민권익위원회는 만장일치제를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도 법률에 만장일치제를 규정하면 따를 것인지 질의
- 소위원회 구성을 4명으로 바꾸는 것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에 따른 구성위원 3명 이상 찬성을 우회하려는 것이라는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3조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규정은 최소한 3명 이상의 의견 합치를 요구하는 것이라는 의견
- 현재 전원위원회 회부 규정과 소위원회 기각 규정이 없는 상태라면 지난 22년간의 관례대로 의견 일치가 없을 때에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8조의2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고 인권위원의 책임 면제를 규정하고 있는데, 김용원 상임위원이 소위원회에서 기각한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
- 제대로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상임위원회의 안정적 운영 계획 마련 필요
- 자리 배치를 이유로 회의가 개최되지 못하고 있는 경위에 대한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 의사운영 매뉴얼 별지의 좌석 배치도에 대한 재검토 지

시는 부적절하다는 지적

- 검찰·경찰·국가정보원 등을 담당하는 침해구제1소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대한 지적
- 법조인이 대부분인 현재 인권위원 구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
-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 장애인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장애당사자의 인권위원 포함 필요
- 소위원회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지명권자 또는 추천권자 비율을 고려하여 소위원회 위원 구성 필요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해명서 요구에 대한 이충상 상임위원의 답변 내용의 문제점 지적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특별심사 해명서 요구에 대해서 국가인권위원회는 9페이지 분량, 이충상 상임위원은 16페이지 분량, 김용원 상임위원은 1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제출한 것과 관련한 질의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김용원 상임위원의 일본군 성노예 관련 발언에 대한 답변 요구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의견에 대한 질의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답변 요구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입장 표명 필요
- 차별적 발언으로 페이스북 계정이 차단되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1인 시인 중인 서울시기독교총연합회 공동회장을 국가인권위원장이 만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인권감수성이 부족한 상임위원들의 태도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적절한 제지와 통제 당부
- 김용원 상임위원이 채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하여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추락시켰음에도 사과나 인사조치가 없는 것에 대한 지적
- 김용원 상임위원이 채해병 사건과 관련하여 군인권센터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질의
- 김용원 상임위원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의 부적절성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무총장 또는 기자 등을 대상

으로 한 부적절한 발언에 대한 질의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발생한 직장 내 갑질 문제에 대한 지적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
-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이충상 상임위원의 언행에 대한 감사 결과에 관한 질의
- 이충상 상임위원이 외부에 공개되어서는 안 되는 면접위원의 정보를 알게 된 경위에 관한 질의
- 이충상 상임위원 감사 결과 비공개의 부적절성에 관한 지적
- 이충상 상임위원의 직장 내 괴롭힘, 폭언 등 언행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 국민 정서에 부합할 수 있도록 인권위원회는 발언에 주의할 것을 당부
- 임기만료 상임위원의 후임 상임위원 임명 시까지의 직무 수행 문제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인사문제 해결이 중요하다는 지적
- 업무현황보고 내용상 평등법 제정 추진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장의 견해 확인
- 국가인권위원회의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한 적극적 추진 의사 유무 확인
-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법안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며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과 조직 논리를 앞세운 법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국민 90%가 차별금지법에 찬성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
-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과 관련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질의
- 2024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의 자유토론 게시판을 폐지하였는데, 표현의 자유 보장 측면에서 인권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도록 자유토론 게시판 재개설 필요
- 위원장 명의 보도자료의 배포 방식을 변경한 이유에 대한 질의
- 연간보고서 및 인권상황보고서 발간 예산 현황 확인 및 조속한 발간 촉구

-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회의의 회의록 및 영상 공개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 가치, 인권 보장 준수 및 정치적 중립성 유지 당부
- 사무처 간부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국가인권위원장을 보좌하도록 당부
- 사인 간 인권침해 행위의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대상 여부에 대한 질의
- 인권침해에 의하여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서 현장에 급파된 조사관의 필요 조치 가능 여부에 대한 질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현안 사안으로 보고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 구성·조직 및 예산 독립과 「인권정책 기본법」 제정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 역할 정립은 면밀한 검토 필요

○ 진정처리 및 정책권고

- 위안부 및 강제징용 문제에 대하여 피해자 중심 접근 방식을 견지하도록 권고 필요
- 검찰 수사과정에서 피조사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해당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현황 파악 및 직권조사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공공기관은 물론 교육 등 우리 사회 공적 영역에서의 수용률이 낮으므로, 기관 평가지표 채택 등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정당 대표의 대통령 인격권 침해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에 관한 질의
- 법제사법위원회의 채해병 사망사건 청문회와 관련하여 법제사법위원장 에 대한 직권조사 시도의 부적절성 지적
- 진정사건 처리 지연 문제 및 처리 지연 사유 미통지 문제 지적
- 정의기억연대의 진정에 대한 기각 결정 통지 등 후속조치 미이행 지적
-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성명서를 발표하거나 비판 또는 지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

○ 군인권

-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군인권보호관의 국회 이관 필요
-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결과보고서에 군의 후속 조치가 미흡하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제대로 된 결정이 없는 것은 문제라는 지적
- 군인권보호관이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고 있지 못하므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 재설치 필요
- 육사생도 3·14 파이데이 관련 조사,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만 채택하고 군의 자체적 개선책 마련을 이유로 정책권고와 의견표명을 하지 않은 것은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

○ 북한인권

-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 촉구
- 북한인권재단 설립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노력 당부
- 2019년 11월 어선으로 귀순한 북한 주민 2명의 추방과 관련한 진정 각하 관련 사안 질의
-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과 「북한인권법」 이행 당부
- 2023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북한인권재단 이사 의 조속한 추천 권고가 여전히 유효한 것인지 질의
-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권고에 대하여 더불어민주당에서 권고 이행계획이나 불이행 사유서를 제출했는지 확인
-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 인권이사회 등 국제기구와의 공조 계획 유무 질의

○ 학생인권

- 교칙에 따른 휴대폰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는 의견
- 휴대폰 일괄 수거와 관련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충분한 의견 수렴

과 논의 없이 이루어졌다는 지적

- 세계 120개국 국가인권기구 중 학생 휴대폰 수거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인지 확인
- 휴대폰 수거에 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교육의 특수성, 학교 현실, 법령에 보장된 교원의 생활지도권을 반영한 것으로 평가한다는 의견
- 경기도교육청의 공문에 따라 관내 학교에서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포함한 1,712종의 책이 폐기된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의견에 관한 질의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자료 선정·구입 절차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간행물윤리위원회의 유해간행물 및 청소년 유해간행물 목록표에 포함되지 않은 채식주의자를 청소년 유해도서로 폐기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진정에 대한 질의
- 채식주의자를 인권도서로 지정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 장애인·여성·노동인권 등 그 밖의 인권

- 시설거주 장애인의 전원조치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관한 질의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면적기준의 폐지 필요성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관한 질의
- 2024년 6월 한 유튜버가 임신 36주차에 낙태시술을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는데, 이 사건은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이를 둘러싼 의견 대립으로 입법 공백이 지속되는 와중에 발생한 것으로 입법 미비를 메꾸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노력 촉구
- 노란봉투법과 같이 사회적·법리적으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의견 제시의 부적절성 지적
- 재난피해자 권리 보호를 위한 인권 가이드라인 관련 질의
- 재난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혐오표현을 포함한 혐오표현과 차별, 인권에 대한 내용이 전 공무원 대상 교육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지적
- 국가인권위원장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인식에 관한 질의
- 교정시설 수용자의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악용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

-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 개선 필요
- 딥페이크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 및 추진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운영 중인 사이버 인권교육 교육프로그램에 딥페이크, AI, SNS와 관련된 인권침해 방지 관련 내용이 없으므로 정비 필요
 - 2023년 6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이태원 특별법 의견 표명 결정 당시 이충상 상임위원의 발언 내용에 관한 질의
 -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한 재난피해자 혐오 표현 예방 가이드라인을 국가인권위원회부터 준수하여야 한다는 지적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윤석열차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고 표현의 자유를 탄압한 것에 대한 질의
 - 초고령사회를 맞이하여 노인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 파악 및 실제적인 대안 마련 필요
 - 윤석열 대통령을 풍자한 쇼츠 영상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의하여 접속차단되고 영상을 공유한 사람들이 압수수색을 당하는 것에 대한 국가인권위원장의 입장에 관한 질의
 -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사건을 수사하기 위하여 검찰이 이름·주소·주민등록번호를 광범위하게 수집하는 것이 인권적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질의
 - 국가인권위원회는 공권력 행사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비밀,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및 대응 필요

1. 국회사무처

- 국회청사의 안전·보안 강화 및 화재 대응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의원 보좌직원의 근무여건을 고려한 보수 현실화 등 처우개선 및 복지제도 강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회사무처 직원 및 보좌직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정당한 보수지급을 위한 개선책을 검토할 것
- 국회세종 의사당이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직원의 불편 해소를 위한 정주·교통 여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의원회관 회의실 사용허가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상시출입증 발급 국회 재직기간 요건을 완화할 것
- 의원회관 의원실별 개별 냉방 도입을 검토할 것
- 국회의장 및 국회사무총장 표창 대상자 수와 비교섭단체 배분을 확대할 것
- 국회인권센터 활성화 및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사무처 내 공익신고 담당 기구의 설치·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
-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회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할 것
- 중증장애인 국회의원에 대한 활동지원인력을 고려하여 의원실 운영비 증액방안을 검토할 것
- 국회 내 키오스크를 과기부 장애인접근성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할 것
- 장애인의 국회 회의실·기자회견장 등 출입·이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노력할 것
- 기자회견장 수어통역 서비스의 안정적인 제공방안을 마련할 것
- 지속가능발전 인식 제고 관련 교육을 내실화하고, 보좌직원 연수·교육을 강화할 것

- 국회고성연수원 시설 확충 및 어린이 프로그램 신설 등을 검토할 것
- 의정기록과 초과근무 부정수급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의정기록과의 직무 분석·진단을 통해 조직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 정보화 관련 용역업체의 사업수행과 인력투입 관련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 청사 및 의원회관 내 인터넷 속도 저하, 정보기기 오류 등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 국회방송의 국정감사 중계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
- 국회방문객을 위한 휴게공간 조성방안을 검토할 것

2. 국회도서관

-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영남권인 부산, 충청권인 세종에 이어 호남권인 광주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용역사업 간 인력 중복 문제 등 용역사업 관리·감독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점자·음성자료 등의 구입을 확대하고, 장애차별금지 관련 법령 기준에 미충족하는 키오스크를 교체·보완할 것
- 국회도서관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천위원회 추천을 통하여 국회도서관장을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AI의정분석서비스 아르고스의 기능을 보완하여 서비스 질을 향상하고 차별성을 강화하며 이용률을 제고할 것

3. 국회예산정책처

-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4. 국회입법조사처

- 장애, 여성, 아동·청소년,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이를 연구보고서에 반영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

5. 대통령비서실

- 대통령의 낮은 국정지지도는 국민들이 대통령에게 기대하는 권위와 신뢰가 상실됨에 기인한 것이므로, 대통령실은 책임감을 가지고 대통령을 보좌하는 등 해결방안을 모색할 것
- 2022년 11월 창원 제2국가산단 현장 실사에 참석한 창원시 공무원 및 국토교통부 평가요원이 명태균과 만났거나 소통했는지 여부, 명태균이 토지 매수를 중용한 대산면 일대 등 창원국가산단 예정지에 대한 매수·매도 현황 등에 대해 전수조사 후 보고할 것
-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한 모든 관저 공사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것
- 2025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이 폐지된다는 가짜뉴스에 대하여 국민들이 현혹되지 않고 확신을 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실시할 것
- 김대남 前 선임행정관이 대통령실 재직 중에 새민연이라는 시민단체를 만들고, 이를 통한 언론사 고발 사주, 극우 유튜버 시위 사주 등을 한 것에 대한 대통령실의 내부감사나 법적 조치 및 새민연에 정부보조금이 지원되었는지 확인 후 보고할 것

6. 국가안보실

- 2018년 4월 문재인 前 대통령과 김정은이 회담하면서 전달한 USB에 대한 진상 파악을 통해 국민의 궁금증과 우려사항을 해소할 것
- 북한이 발사한 ICBM은 미국의 주요 도시까지 타격이 가능한 무기이므로, 국민들에게 안심을 줄 수 있도록 대처할 것
- 북한 오물풍선이 처음 발견된 후 합동참모본부가 질병청에 생물테러를 확인하기 위한 다중탐지키트를 요청하였는데, 국방부의 다중탐지키트 보유 현황과 해당 키트가 생물테러 고위험군 바이러스를 검출할 수 있는지 확인해서 보고할 것
- 정부의 두창 백신 보유 현황 및 북한 오물풍선 수거작전을 수행하는 군인과 경찰 대상 두창 백신 접종 현황을 보고할 것
- 북한 오물풍선을 격추하지 않고 안전하게 수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할 것

7. 대통령경호처

- 대통령에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예상 가능한 상황에 대한 매뉴얼을 제작하여 효과적으로 대처할 것
- 위해상황이 아닌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과잉 경호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법률에 근거한 적법한 경호활동을 실시할 것

8. 국가인권위원회

- 합의제 운영 원칙 및 관례에 부합되도록 소위원회 구성 및 의결정족수를 해석·적용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의 국가인권위원회에 대한 특별심사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내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행위 등에 대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홈페이지에 인권과 관련한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모든 회의에 대하여 회의록 및 영상 등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의 수용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진정사건이 법정기한 내에 처리되도록 하고 처리 지연 시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진정인에게 그 사유가 통지되도록 할 것
- 군인권보호관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할 것
- 북한인권재단 이사가 조속히 추천되어 북한인권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
- 경기도교육청의 학교 도서관 자료 선정·구입 절차 및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도서가 폐기된 것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 낙태죄 위헌 결정 이후 입법 공백 문제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할 것
- 사이버 인권교육을 포함한 인권교육에 재난피해자에 대한 혐오표현, 딥

페이크, AI, SNS와 관련된 인권침해 방지에 관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것

- 교정시설 수용자가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악용하는 문제에 대하여 법무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와 협력하여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
- 노인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장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인권의 실제적인 보호 방안을 검토할 것